

비상경제장관회의

24-5-2

(공개)

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

2024. 3. 13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.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...	1
II.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	3
III.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	5

I.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

1. 주요 내용

◇ 국민이 공공·민원서비스 신청 시,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구비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정보 연계, 사무정비 등을 통해 해소

□ (구비서류 제로화) 정부가 이미 수집·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서류로 국민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공공·민원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

○ '26년까지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모든 민원·공공서비스*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정보 연계 적용 * 총 1,498개 서비스('23.12월 기준)

- (~'24.4월) 신청건수, 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100여개 우선 제로화
- (~'24년말) 321개 추가 제로화 ■ (~'26년) 모든 서비스 제로화

□ (인감증명제 개선)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사무 2,145건(관행요구 295건+ 필요성低 1,850건)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 방식의 대체수단 제공

○ 근거규정 없는 관행적 요구사무 295건은 조속히 정비(~'24.12월),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,850건 단계적으로 정비*(~'25.6월)

* (1단계) 기관 자체 폐지의견 사무(765건) 정비(~'24.6.)

(2단계) '18~'21년 기 폐지사무와 동일·유사 사무(495건) 정비(~'24.12.)

(3단계) 1단계 폐지 사무와 유사한 사무(590건) 정비(~'25.6.)

○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, 인감정보 연계, 간편인증으로 대체

- ①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의 일반용 인감증명서(부동산 등기용, 금융기관 제출용 제외)를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('24.9월)
- ② 부동산 등기 시, 인감-등기시스템 연계로 인감정보 확인('25.1월)
- ③ 자동차 이전 등록 시 간편인증으로 인감증명 대체('25.1월, 국토부)

2. 추진상황 및 성과

- (정보연계) 당초 계획(4월)보다 앞당겨 100여개 민원·공공서비스*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 조치 완료
 - * 근로자 유급병가 지원,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, 예방접종비 지원, 학교 입학축하금 지급,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, 전입세대 환영지원금 지원,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
 - ※ 민간 통신사(KT)와도 가족관계 정보를 연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결합 요금 할인 신청 가능('24.2.19.)
- (사무정비)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,850건 중 116건*에 대해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·행정규칙 등 개정('24.1월)
 - * 지자체 조례사무 24건, 행정규칙 사무 77건, 훈령 사무 13건, 예규 사무 2건
- (현장소통) 중앙·지방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제 개선 관련 조치·협조사항 안내('24.2.7.)
 - * (참석)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 지능정보화책임관 330여명(온라인 병행)
 - ※ 구비서류 제로화 협조,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계획 등 공문 안내('24.2월)

3. 향후 추진계획

- (정보연계) 기관 간 정보를 조속히 연계하여, 올해까지 321개의 민원·공공서비스* 추가 제로화(총 421개, ~'24. 12월)
 - * 고용장려금 신청, 월세자금보증 신청, 행복주택 입주 신청, 청년창업 특례보증 신청 등
- (이행력 확보) 실제 현장에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기관 담당자 교육('24.3월) 및 현장점검 실시('24.6월)
- (사무정비) 정비대상인 총 2,145건(관행 295건+필요성 낮은 사무 1,850건) 중 올해 상반기까지 900여 건의 인감요구 사무(약 42%) 정비
 - ※ 중앙·지방 협력체계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이행상황 점검
- (서비스 개시) 온라인 발급 등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 제공
 - 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개정*을 4월까지 완료 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('24.9월)
 - 일부 등기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시 인감정보 공동이용 시범 서비스 개시('24.9월) → 전 등기소 대상 본격 개시('25.1월)

Ⅱ.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

1. 주요 내용

- (게임이용자 보호)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('24.3.22.), 게임아이템 환불전담창구 등 마련(공정위),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의무 부과*
 - * 게임산업법,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 대리인제도 각각 도입(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대상)
- (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) 해설서 배포, 모니터링단 운영(문체부)
- (온라인·모바일 표준약관 개정) 서비스 종료 시 30일 이상 게임 아이템 환불 전담 창구 운영 및 확률 정보공개 규정 명시(공정위)
- (국내대리인제도 도입)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여하여 이용자 보호 추진(문체부, 공정위)
- (신속한 피해 구제) 게임사기 전담수사관 지정(경찰청), 소송 제기 없이 이용자 피해 구제할 수 있는 '동의의결제도' 도입(공정위)
 - (소액사기 전담 인력 배치)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여 명 내외 게임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(경찰청)
 - (집단적·분산적 피해구제) 게임산업법 내 소송 특례 규정 마련(게임사 손해배상 책임, 피해자 입증완화 등) 및 콘텐츠진흥원-소비자원 간 업무 협약을 통한 집단분쟁 이관* 처리(문체부)
 - * 현재 콘텐츠진흥원 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집단분쟁 처리 불가
 - (동의의결제 도입) 전자상거래법에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'동의의결제' 도입(공정위)
- (글로벌 표준)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,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개정

2. 추진상황 및 성과

- **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 전 홍보 및 관련 제도 정비**
 - (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) 해설서 배포(2.19.) 및 홍보 강화*, 모니터링단 1차 채용(12명, 2.14., 추가 12명 3.14.까지 채용)
 - * 확률형 아이템 범위, 표시사항·방법 등 구체 기준 담긴 해설서 배포(2.19.),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관련 기고(2.26.), 기획기사(2.29.), 카드뉴스 및 유튜브 영상 배포 등
 - (표준약관 개정) 확률 정보공개 및 환불 전담창구 운영 규정 등을 포함한 온라인·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및 배포(2.27.)
- **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인력 확보 및 기관간 협조 체계 구축**
 - (소액사기 전담 인력) 전담수사관 전국 150개 경찰서 246명 지정(2.23.)
 - (집단적·분산적 피해구제) 소송특례 마련 위한 관계부처(법무부·공정위) 업무협약(2.16.)

3. 향후 추진계획

- (국내대리인, 동의의결) 국내대리인제도, 동의의결제도 도입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(~'24.3월)
- (집단적·분산적 피해구제) 게임산업법 내 소송특례 마련을 위한 개정 절차 추진 및 집단분쟁 조정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
 - 조문 마련(손해배상 책임 등) 및 전문가 의견 수렴, 의원입법 발의 추진(~'24.3월)
 - 콘텐츠진흥원-소비자원 간 집단분쟁 사안 이관 위한 업무협약 체결(3.15.)
- (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)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이양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 및 등급심의 기준 개선 추진(~'24.12월)
 - 등급분류 민간이양* 관련 연구(24.3~6월) 및 심의기준** 검토 자문단 구성(24.5월)
 - *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사행성모사 및 아케이드 게임 제외 추가 위탁 등
 - ** 해외 게임물 등급분류 사례, 영화 등 타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 등 반영
 - 게임산업법 개정 추진(~'24.12월)

Ⅲ.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

1. 주요 내용

- (비대면진료 활성화)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의 의료접근성 제고,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
 -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, 의료법 개정 전 국민 불편이 없도록 「비대면진료 시범사업」 실시('23.6.1.)
 - 시범사업 기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료접근성 제고, 안전성 강화를 위한 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」 시행('23.12.15.)
 -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원칙, 의료 취약지 거주, 휴일·야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허용
- 비대면진료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, 제도화에 대비하여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지속 보완·발전
- (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)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및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생태계 조성
 - (진료정보교류 활성화)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, 진료기록과 CT, MRI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·정확하게 공유
 - *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중복검사 감소, 의료비 절감 등 환자 편의 증진 및 진료연속성 확보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 기대
- 참여 의료기관 확대, 진료기록·영상정보 교류 확대
- (의료정보교류 기반 강화) 의료기관에서 표준화된 고품질 데이터 생성·제공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新보상체계 마련 추진
- 의료정보 품질 등에 대한 평가 기반 보상체계 방안 마련

2. 추진상황 및 성과

- (비대면진료 활성화) 의료접근성 제고 및 홍보·안내 강화
 -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으로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 약 19% 증가, 휴일·야간 시간대 약 163% 증가('23.9.1.~12.14. 대비 '23.12.15.~'24.1.31. 기준)
 -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국민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('24.2.23.)
 -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증 환자 진료의 분산 효과, 외래 진료 부담 완화로 중증 및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데 기여
 - 거주지 주변에서 필요할 때 비대면진료를 이용(토론자 건의사항)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실시기관 목록 공개('24.2.23.)
- (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) 현장 소통 및 규제샌드박스 등 추진
 - (진료정보교류) 참여 의료기관 확산('23. 8,600개소→'24. 9,400개소)을 위해 거점의료기관, 지역 보건기관 현장 참여 독려('24.2)
 - (규제샌드박스)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활용을 희망하는 헬스케어 기업 대상 규제샌드박스 신청·접수 및 검토('24.2~)
 - * '24.3.7(목)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1건 심의·의결
 - (디헬법) 핵심 쟁점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 및 의원실 협의('24.2)

3. 향후 추진계획

- (비대면진료 활성화)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화 추진
 -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비하여 실시현황 및 효과 평가 연구,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('24년)
 -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추진('24년)
- (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) 인프라 고도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
 - (진료정보교류)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개선 및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·의료진 등 사용자 맞춤형 시스템 고도화 추진('24.12)
 - * 개인 대상 서비스 확대('24), 고화질 영상뷰어 도입('25),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도입('26)
 - (법·제도) 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지속 추진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新보상체계 방안 마련('24.12)